

2020년 09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63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년 09 (Vol.63)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송유미, 주찬영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5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국토부, 공공·민간 협업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수립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민간 정착 위한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인천시, 「인천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 초안 공개

경기도,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최종 승인

10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16개 사업 의결

문화재청,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0선 선정

국토부,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총 23곳 선정
국토부,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국토부, 주민역량강화사업 통합한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서울시,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곳 신규 선정
광주시, 2022년까지 도시바람길숲 조성 추진
제주도, 2021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최종 선정
세종시, 시내 전역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6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구축·운영계획
서울시, 공공공간 관련 데이터 연계 구축 "서울 공간정보맵" 오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 13개 자치구 시작
광주시, 제1기 건축정책위원회 출범
경남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09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생활교통과, 2020.09.01.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간다. 또한, 대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여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 2.0(‘20.3)을 통해 유형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년 말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하여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국토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0.09.02.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20→40%), 복합기준 완화(3개 이상→2개 이상), 총량폐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

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개정사항
❶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제약 조건 완화		
-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20→40%)		지침 개정
-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 완화(3개 이상→2개 이상)		지침 개정
❷ 입소구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정 요건 완화		
-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최소면적 제한 폐지		지침 개정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		법률 개정
❸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 제도적 기반 마련		
- 주민제안 허용, 규제완화 확대(공개공지 확보 배제) 등		법률 개정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정비과, 2020.09.08.

완료

건축
정책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 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실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자체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선발 시 적용된다.

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생활교통과, 2020.09.21.

완료

건축
정책

안전

국토교통부는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와 구조물을 설치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2020년 9월 22일부터 6개월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며, 안전울타리 설치, 10cm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에 대하여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하여야 한다.

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산업진흥과, 2020.09.10.

진행

국토
정책

환경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수소 기반의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표준 제시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기본 개념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❶에너지 자립, ❷탄소중립, ❸규제자유를 통해 AICBM의 4차 산업이 실현되는 산업단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탄소중립의 경제구조 전환에 의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재정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용역에 앞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스마트 시티, 산단조성 등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콜로퀴움(colloquium) 방식의 토론을 3회에 걸쳐 시행했고,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감도(안)]

국토부, 공공·민간 협업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수립

국토정책과, 2020.09.23.



국토교통부는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개발방식		도심융합특구
공간 형태	도시 외곽/저밀도 (접근성, 정주여건 부족)	⇒	도시 중심지/고밀도 (접근성, 정주여건 양호)
지원 방식	개발(H/W)과 기업지원(S/W) 분리	⇒	개발(H/W)과 지원(S/W)을 집적
달성 목표	공급자 관점의 목표 (단편적 목표, 시행자 사업성 충족)	⇒	수요자가 필요한 니즈 충족 (토탈 서비스, 좋은 입지 등 제공)

지역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도심융합특구는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새로운 구심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주거·문화 사업을 융합하여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안(예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민간 정착 위한 종합계획 수립

디자인정책과, 2020.09.07.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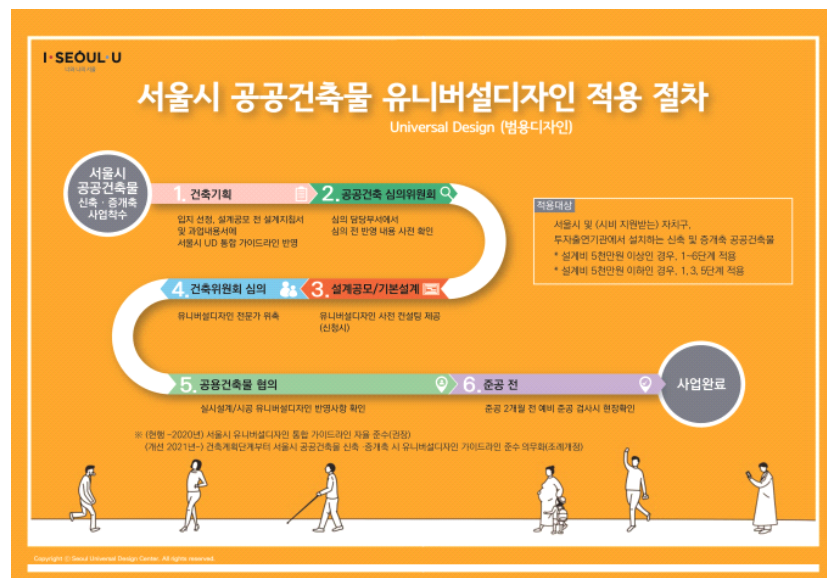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토대를 닦아온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전면 확대한다. 사람들이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연령, 성별, 장애,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복지를 실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 단계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라는 비전 아래 ①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②유니버설디자인 전담기구 설치 운영, ③성공모델 개발 축적, ④전 사회적 확대 및 제도개선,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시는 '21년부터 모든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둘째, 싱크탱크 역할을 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한다. 셋째,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보행, 공원 조성 등 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넷째,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22년부터 시범운영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커리큘럼을 개설하며, 전문가 집단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절차]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도시농업과, 2020.09.23.



서울시가 '24년 도시농부 100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도시농업을 한 단계 진화시키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3대 분야는 ①공간확보 ②시민참여 확대 ③사회적 가치 확대다. 첫째, 도시농업 공간을 240ha 규모로 확대한다. 둘째,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일상화’를 시도한다. 셋째, 도시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시농업을 활용한다.

인천시, 「인천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 초안 공개

환경기후정책과, 2020.09.22.



인천광역시가 「인천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의 초안을 공개했다.

종합계획 초안에 따르면 “그린뉴딜을 통한 환경·안전 개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약 5조원을 투자하여, 인천경제와 시민생활의 녹색 전환을 위한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전략(4대)	추진과제(11개)
1. 저탄소 에너지 도시 인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확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
2. 청정 생태계 도시 인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원순환체계 혁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기관리체계 혁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물관리체계 혁신
3. 클린해양도시 인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정 해양 서식지 조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양 생태계의 복원 및 보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민에게 돌려주는 친수공간
4. 녹색산업선도도시 인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첨단 그린기술 및 산업 육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조업 친환경 전환 지원

경기도,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최종 승인

도시정책과, 2020.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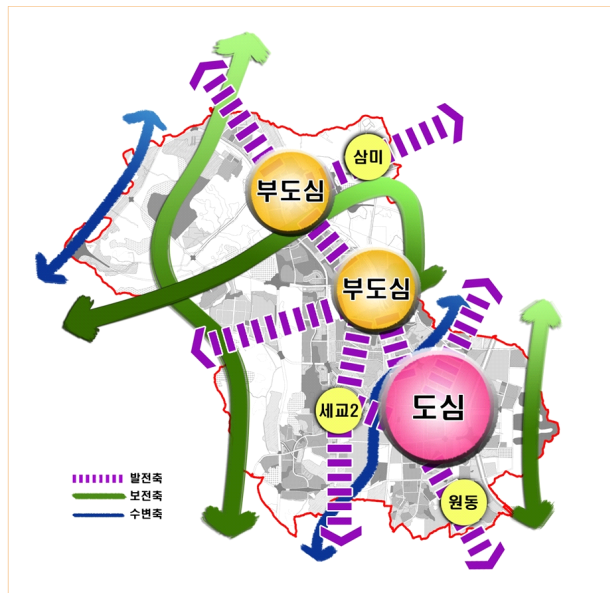


도시
정책

경기도가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오산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신규 개발거점과 연계해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장래 도시 발전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2지역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3도심으로 개편했다. 공원녹지 부문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주민 1인당 공원면적 12.5㎡ 까지 확보토록 계획했다.



[2035 오산도시기본계획 로드맵]

국토부,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16개 사업 의결

도시경제과, 2020.09.08.



국토교통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 들을 심의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되었으며, 동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되었다.

문화재청,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0선 선정

활용정책과, 2020.09.14.



문화재청은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야행」 42선, 「생생문화재」 160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16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42선, 「고택·종갓집 활용」 40선 등 총 400선을 선정 하였다.

이들 사업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고자 기획 되었다.

2021년에는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400개 행사를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일부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토부,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총 23곳 선정

도시재생정책과, 2020.0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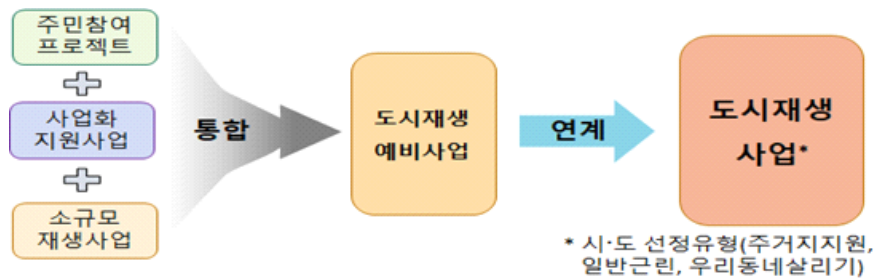
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총 8곳이다. 한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총 15곳이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 특위에서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 재생사업 등 3개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주민참여 제고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2년부터 시·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선행한 곳이 신청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 주민참여프로젝트('18~), 사업화지원사업('17~), 소규모재생사업('18~)으로 기반시설정비, 주민 참여, 창업사업화 등 지원

더불어,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내년 6월 까지 추진한다.



[역량강화 사업 통합 및 연계]

국토부,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건축정책과, 2020.09.17.



국토교통부는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0.4~'20.8)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그리고 특별부문 2곳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 발생률 등의 지표를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의 지표를 발굴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구분	내용
일반부문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특별부문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

국토부, 주민역량강화사업 통합한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도시재생역량과, 2020.09.23.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첫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 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 ‘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하여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곳 신규 선정

주거재생과, 2020.09.02.



서울시는 시내 5곳을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지 재생형)으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 초기부터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자치구	선정지역	지역특성 및 선정사유
금천구	독산2동 1035일대	▶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저층주거지로서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과 자치구 의지가 강함 ▶ 재생지역내 위치한 초등학교와 연계한 재생사업 모델 제시 기대
중구	신당5동 144-11일대	▶ 저층주거지, 전통시장(백화), 봉제산업 등이 쇠퇴한 원도심으로 다양한 재생 시도 및 효과 기대
양천구	신월1동 799일대	▶ 70년대 초 서울지역 철거민 이주단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항공기소음지역으로 재생지역내 전통시장(신영, 월정로)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보유
마포구	합정동 369일대	▶ 노후 저층주거지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상존, '18년부터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중 ▶ 마포구 최초 재생지역으로, 인근 화력발전소 공원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명소화 기대
중랑구	망우본동 182-34일대	▶ 철도 등으로 주변지역과 단절되고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과 재생을 통한 지역 이미지 쇄신 필요 ▶ 지역주민의 재생의지와 사업목표가 명확하여 재생사업 효과 기대

광주시, 2022년까지 도시바람길숲 조성 추진

공원녹지과, 2020.09.01.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200억(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



*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어 공기순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시 내 산재된 숲을 선형으로 연결한 숲

광주시는 도시 외곽 산지, 도시 내 공원, 녹지대 등 도시공간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찬공기가 생활권 주거지역 까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공기순환을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에 기여하는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여건을 고려해 바람길을 분석하고, 자치구와 함께 공유지,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바람길숲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주변 등 숲조성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 2021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최종 선정

정책기획관, 2020.09.11.



도시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 2021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11억 6,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저발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 간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생산서비스 1개 분야(지역산업 활성화), 공공서비스 5개 분야(유아·보육, 교육, 노인 복지, 사회복지, 문화·여가)다.

2021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는 총 19개 사업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읍면동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한림읍	한림 서답마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빨래방 공간 조성 ○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빨래 수거·배달 서비스 제공 등
한림읍	지역생산업체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생산업체들과의 공동 판매장 조성 ○ 한림읍 지역 내 생산자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교류 및 생산성 강화 등
조천읍	세계 자연유산마을 마을학교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교육 제공 등
삼도2동	함께돌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한 전용 공간 조성 ○ 어린이를 대상으로 비상시 돌봄 서비스 제공 등
표선면	표선 문화공동체 혼디 만들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대상 음악 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 ○ 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세종시, 시내 전역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스마트도시과, 2020.09.09.



세종특별자치시가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시내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며, 총 4건의 스마트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스마트실증 사업으로는 ①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②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③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④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4개 스마트실증 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폴이집” 구축·운영계획

주택정책과, 2020.09.23.

진행

주택
정책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폴이집*”이 확대·개편 작업을 마치고 운영한다.

* 기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확대·개편

정책폴이집은 ①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 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정리하여 게시, ②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사례를 종합한 FAQ를 게시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 ③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설치하여 통합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관계기관 컨택 포인트도 적시한다.



[정책폴이집 웹사이트]

서울시, 공공공간 관련 데이터 연계 구축 "서울 공간정보맵" 오픈

도시공간개선반, 2020.09.11.



국토
정책

건축
정책

서울시가 서울시내 190여 종, 약 15만 건 공공공간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서울 공간정보맵’을 오픈한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 정보, 서울의 개방형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현황 등을 지도상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 등이 관리하는 각종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공공공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통합 구축했다.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 시스템 상의 정보도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새롭게 공개한다. ‘서울 공간정보맵’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를 기반으로 한 검색·분석 기능이다.

서울시 공간정보 중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다. 또 ‘서울 공간정보맵’은 공공공간을 매개로 시민과 공공이 양방향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창업 준비, 연구 활동, 도시건축 분야 정책사업 기획 등 시민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시는 PC는 물론 태블릿PC, 모바일로 ‘서울 공간정보맵’ 공공공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시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서울 공간정보맵’을 통해 서울의 공공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시민들이 공공공간이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서울 공간정보맵 웹페이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 13개 자치구 시작

도시관리과, 2020.09.21.

완료

도시
정책

서울시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서비스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구축한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서울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GIS (지리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터넷 지도 상에 시각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13개 자치구 28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시범 서비스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DB구축 작업을 완료해 내년 초 25개 자치구 전체 총 482개 구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 이용방법]

광주시, 제1기 건축정책위원회 출범

도시계획과, 2020.09.24.

완료

건축
정책

광주광역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광주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 공간환경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유도, 사업 프로그램 제시 등 광주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수준이 전폭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사업간 연계 또는 양질의 공간환경을 디자인해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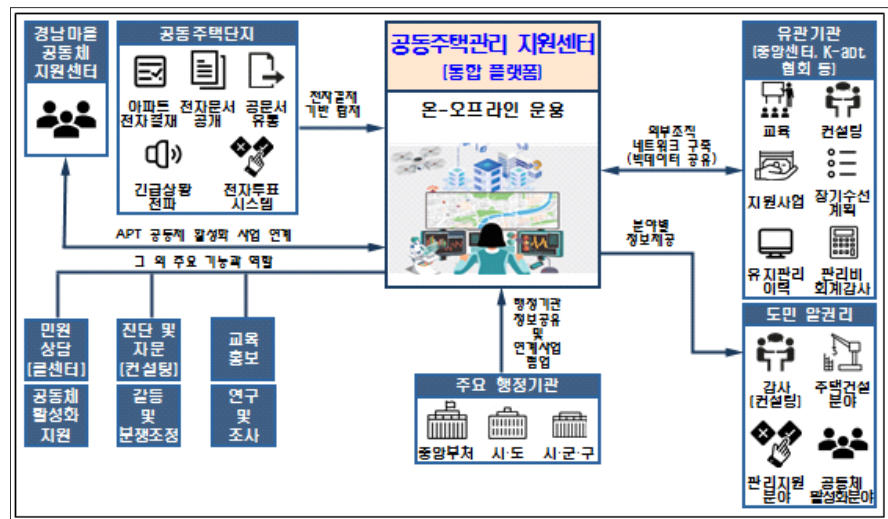
건축주택과, 2020.09.20.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양에서부터 공사, 준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주택품질, 관리운영,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등 체계적 행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을 통해 ①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구현, ②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품질검수로 공동주택 하자 최소화. ③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 및 디지털 공동주택 도입으로 관리의 투명성 실현, ④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치한다.

경남도는 이러한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즈음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기초로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개념도]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ro, Sejong-si, 30103, Korea



9 772635 514009
ISSN 2635-5140